

지역주민 눈 밖에 난 세화오일시장

마을회 지난달 도의회에 '오일장 폐쇄' 청원 "시설관리 미흡·도로점거 판매... 교통혼잡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마을 주민들이 최근 세화리 마을해변에 위치한 세화민속오일시장을 폐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14일 구좌읍 등에 따르면 세화리 마을회 등 세화리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에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준공된 세화민속오일시장에서 불법 증축 및 불

법 전대·전매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불법 주차, 과도한 쓰레기 배출, 도로점거 판매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일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엔 범죄 위험이 있는데다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천장에 비둘기가 서식하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현재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장이 열리는 날이면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빚

고 있다고 전했다. 공영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탓에 오일장 인근 도로나 해안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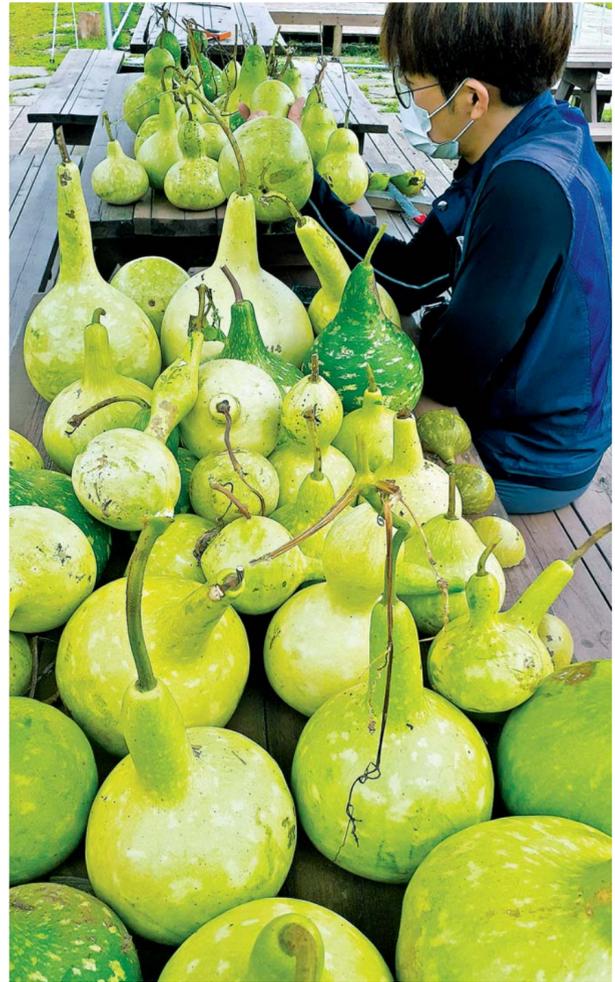
제주시는 세화오일시장 뒤편 공영주차장에 2층 규모의 주차 타워를 신축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하지만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부적정으로 판단함에 따라 세화오일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제주도 구좌읍 세화항이 선정됨에 따라 마을회 차원에서 세화오일시장 공간을 활용해 1층은 오일시장으로

사용하고, 2층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복합 시설로 꾸며보려 했으나, 이마저도 일부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고 제주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세화지역 주민들은 "세화민속오일장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상인회와 행정에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관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환경·생활에서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세화리민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세화민속오일시장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가을 분위기 물씬... 조롱박 수확 14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의 한 직원이 공원내에서 수확된 조롱박을 정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생활임금 150원 인상 인간다운 삶 가능한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만원에서 1.5% 인상된 1만 1500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생활임금 150원 인상으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지 대답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기본적인 생계비용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고작 1.5%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주도는 행정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회의를 단 한차례, 그것도 사전에 제주도 가 일반적으로 정한 '동결 또는 1.5% 인상'이라는 두 가지 안 중 선택을 강요하는 졸속적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김만일기념관, '김만일' 이름 사용 말라" 기념사업회 "기념관 부실공사 의혹... 되레 이미지 추락"

(사)한마공신 김만일기념사업회가 김만일기념관에 '김만일'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김만일 후손 단체인 '김만일기념사업회' (이하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명칭에 '김만일'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제주도에 요청했다. 또 임금이 내린 교지 등 유물과 화가들이 재현한 김만일 일대기 그림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4000여㎡ 부지, 건축면적 886㎡에 전시실과 체험실·수장고·영상실을 갖춘 기념관을 지난 5월 준공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장맛비로 기념관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건물 옥상 일부에 금이 가기도 했다.

기념사업회는 김만일 공적을 널리 알려야 할 기념관이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의혹으로 김만일 공적을 고양하기는 커녕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만일(1550~1632)은 임진왜란 당시인 1594년 제주마 500마리를 진상해 승전에 기여했다. 이어 1627년 정묘호란 등 국난의 위기마다 말을 바치는 등 총 1000마리가 넘는 제주마를 진상했다. 김만일은 제주마를 진상한 공로로 종1품 승정대부를 받았다.

조정은 김만일의 공로를 인정해 산마감독관(山馬監牧官) 제도를 신설, 사순들이 명마와 임금이 타는 어승마를 생산하도록 했다. 현영종기자

119, 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장애물 적치행위도 단속 적발업소엔 과태료 부과

제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 건물은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 아파트나 개인 거주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불법행위 사항은 피난·방화 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지 등이다.

신고자는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민노총 "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추석 대목까지 겹치면서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 강도를 호소하며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송 물품 분류 작업·배달 인력 추가 투입, 과로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본부는 이어 당일배송 강요 금지를 비롯해 지연배송 허용, 분실책임을 전가 금지, 폭우·폭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강다혜기자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시도 첫 적발

서귀포시 전량 폐기 명령

극조생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하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덜 익은 극조생감귤을 강제로 착색 후 유통을 시도하던 선과장을 울타리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호근동에 위치한 선과장에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급파, 극조생 비상품감귤 약 56t을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선과장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중이었으며, 강제착색된 것으로 보이는 감귤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 않은 곳으로, 품질검사원조차 지정받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즉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위반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조치 명령했다.

서귀포시는 추석절을 전후해 비상품 극조생감귤 유통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극조생 비상품감귤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 지난 7일부터 감귤유통지도 단속을 조기·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상품감귤 유통 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회 이상 적발시엔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60건(4만 5600kg)의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을 적발했다. 현영종기자